



# 광남일보



주간 제 8079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음력 3월 21일)

## 유스퀘어 철거 끝났는데...광주신세계 착공은 언제?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절차 이유로 두 달째 제자리 시 “교통평가 먼저”...신세계 “행정절차 속도 내야”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까지 겹쳐 지연 우려

광주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유스퀘어 부지 철거를 마무리했지만,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연내 착공 목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인 광주신세계는 절차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계획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절차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동일 사업을 두고 ‘속도’와 ‘절차’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지난 2월 광주시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부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3월 5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했고, 이에 맞춰 유스퀘어 부지 내 건축물 철거가 4월까지 마무리됐다.

계획 변경을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이 과정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공공기여 협약 체결, 최종 고사로 이어지며, 교통·재해·환경영향 평가도 병행된다. 그러나 현재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부지 간 의견 조화나 주민 의견 청취 등 핵심 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은 이를 두고 통상적인 절차 흐름과 다른 양상이라고 보고 있다. 유사 사업과 비교해도 속도 차이는 뚜렷하다. 광주 내 또 다른 대형 복합소상공물 개발사업인 전남·일신방직 부지(더현대 광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이후 약 한 달 만에 부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반면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두 달이 남도록 초기 단계에 머



광주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조감도.

물러 있어 동일 유형 사업 간 행정 처리 속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유사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사업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 사례도 있지만, 이번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연내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려면 행정 절차 역시 그에 걸맞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 구조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더현대 광주의 경우 교통계획 변경이 건축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반면,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 도로 설치 여부와 진출입로 위치 등이 바뀌면서 전체 배치와 건축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되

기 전에 부지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경우, 이후 계획 변경 시 동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주민 공감 내용이 변경될 경우 추가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형 개발사업은 각종 영향평가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사업 규모와 여건에 따라 절차 진행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예정된 행정 체제 개편도 변수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어,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행정 체제가 바뀔 경우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대형 개발사업이 인허가 지연과 정책 변화로 장기간 표류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행정 체제 개편 국면에서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절차의 명확성과 일정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5·18 정신헌법전문수목 현수막 걸린 전일빌딩**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헌법전문수목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하루 앞둔 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헌법 전문 개정안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의 헌법전문수목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3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헌법전문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방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10면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환상의 지수대’ 코스피, 사상 첫 7000시대 ▶관련기사 4면

### 민주당, 광산을 보선에 ‘친명’ 임문영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이·6·3지방선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임문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사진)을 전략공천했다. ▶관련기사 8면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광주 광산은 첨단 과학 국가산업단지 위치한 곳”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해 온 임 후보야말로 광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적의 인재”라고 말했다. ▶2면서 계속 이신하 기자 goback@

### 김영록 지사, SK에 전남광주 반도체 팹 설립 요청

#### 최태원 회장에 서한문 전달...RE100·재생에너지 입지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삼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인재·재정 지원 여건을 앞세워 대규모 반도체 투자 유치에 직접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전남도는 6일 김 지사가 최 회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반도체 팹(Fab)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함께 급부상한 전력·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 입지로 통합특별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최 회장이 국회 강연에서 언급한 ‘자본·에너지·GPU·메모리’ 등 AI 산업의 핵심 제약 요인을 거론하며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는 발언을 직접 인용, 통합특별시가 조건을 충족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 기반은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잠재 발전량이 444GW에 달하는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신안·영광·해남 일대 해상풍력과 태양광 단지는 RE100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최대 수준의 인프라로 평가된다. 인제 공급 체계도 강조했다. 통합특별시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핵심 축으로,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연구 중심 대학과 ARM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재정과 제도적 지원 어려도 전면에 내세

었다. 전남·광주 통합으로 확보되는 약 20조원 규모의 균형발전 재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클러스터 지정 역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논리도 담겼다. TSMC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생산거점의 분산 배치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로의 팹 확장은 SK의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의 결단이 지역 산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꼭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선거일 투표** 일시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지정된 투표소 \* 거주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 일시 |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지방선거 투표용지 가이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교육자치,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회 정선 선거, 시·도 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 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 (비례대표), 교육감 선거, 세종·제주 (4장)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례 보충선거도 함께 실시 **지방선거 투표 전 체크리스트**  일정 확인하기  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확인하기  신분증 챙기기  유의사항 확인하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 투표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지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일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지를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